

## 2021년 하도급 분야 동향

### 관련 구성원

#### 김 시 주 변호사

T 02.772.2747

E sjk@hmplaw.com

#### 안 영 은 변호사

T 02.772.2742

E yeon@hmplaw.com

#### 김 영 열 변호사

T 02.772.2778

E youngkim@hmplaw.com

#### 이 선 주 변호사

T 02.772.2841

E leesj@hmplaw.com

공정거래위원회 (이하 “공정위”)는 지난해 3월 “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”을 발표하며, 하도급 분야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보강, 정보 제공을 통한 불공정 피해의 사전 예방,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, 공정과 상생 중심의 계약 문화 확산, 기업의 자발적인 피해 구제 및 자진 시정 여건 조성 등을 추진과제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.

상기 과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입법 노력 끝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이하 “하도급법”)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, 이와 같이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(이하 “지침”)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 되었습니다.

이에 법무법인(유) 충정은 하도급법, 하도급법 시행령 및 지침의 개정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.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### 1.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확대

**[개정 사유]**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은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, 그 기준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나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

**[개정 내용]** 금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(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4항).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제조위탁·수리위탁	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	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
건설위탁	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	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
용역위탁	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 (동일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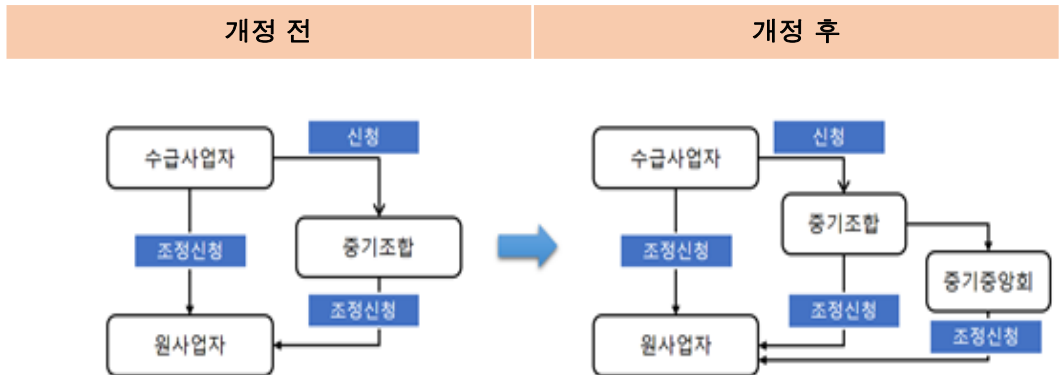
**[기대 효과]** 금번 개정안은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조·수리·건설위탁에 대한 적용 면제 기준을 각 1.5배씩 상향하는 등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을 확대한바, 소규모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

## 2.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, 협의대상 원사업자 및 신청 사유의 확대

### (1)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추가

**[개정 사유]** 현행법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용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음

**[개정 내용]** 금번 개정안은 협상력 및 대금 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에 추가함 (하도급법 개정안 제16조의2). 향후 하도급업체는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



### (2)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

**[개정 사유]** 현행법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현행 시행령은 대상 원사업자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제외하고, 경과 기간도 있어 한계가 있었음

**[개정 내용]** 금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조정 협의 대상 원사업자를 확대하고, 경과기간 규정을 삭제함 (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의2 제3항 제2호)

개정 전	개정 후
대기업, 매출액 <b>3천억원</b> 이상 중견기업	대기업, <b>전체</b> 중견기업
계약 체결 후 <b>60일</b> 경과 후 협의 가능	경과 기간 <b>없음</b>

### (3)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확대

**[개정 사유]** 현행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**인상된 경우에**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음

**[개정 내용]** 금번 개정안은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 (Cost Reduction)을 체결한 후,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**하락하지 않은 경우**를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함 (하도급법 개정안 제16조의2)

개정 전	개정 후
Cost Reduction 관련 규정 없음	<b>[신설]</b> <b>Cost Reduction 약정을 체결하였으나</b> 원사업자가 납품 물량을 축소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<b>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</b>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<b>可</b>

**[기대 효과]** 금번 개정을 통해 ① 협상력 및 대금 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의권자에 추가되고, ②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상당 수의 중견기업이 협의대행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, ③ Cost Reduction 약정의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바,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제고되고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

## 3. 하도급법 벌점 제도 개선

**[개정 사유]**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된 벌점은 하도급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경감될 수 있는데, 현행 벌점 경감 기준 중 일부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거리가 멀거나, 원사업자의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

**[개정 내용]** 금번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① 별점 경감 기준에 4개 항목을 추가하고 (피해 구제, 입찰정보공개, 하도급거래 모범업체, CP 우수업체), ② 2개 항목을 수정함 (표준계약서 사용,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) (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[별표3])

개정 사항	경감 사유	경감 점수 또는 비율	
		현행	개정안
신설	건설하도급 입찰 시 입찰 정보 공개 우수	無	80% 이상: 1점
			50% 이상 80% 미만: 0.5점
	자율준수 프로그램(CP) 평가 우수업체		최우수: 2점
	우수: 1점		
	하도급거래 모범업체		3점
	수급사업자 피해 구제		구제 비율 100%: (최대) 별점의 50% 경감
			구제 비율 50% 이상 100% 미만: (최대) 별점의 25% 경감
수정	표준계약서 사용 우수	2점 (100%)	90% 이상: 1점
			50% 이상 80% 미만: 0.5점
	하도급대금 직접 지급	0.5 점	직불 비율 50% 이상: 1점
			직불 비율 50% 미만: 0.5점
현행 유지	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 우수	1점 (동일)	
	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우수업체	3점 (동일)	
삭제	하도급법 특별 교육 이수	0.5 점	無 (삭제)
	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여하는 표창 수상	2점	
	하도급업체 선정 시 전자 입찰 비율 우수	0.5 점	

**[기대 효과]** 금번 개정안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 원사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별점 제도를 개편한 바, 특히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및 자진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하여 하도급업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#### 4. 별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

**[개정 사유]** 위 3.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시행령상 별점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, 신설·수정된 별점 경감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됨

**[개정 내용]** 금번 개정안은 ① 신설·수정된 별점 경감 사유 별 집행 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, ②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별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불복 절차 종료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누산 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(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III. 21. 가)

개정 사항	경감 사유	변경된 별점 경감 기준의 주요 내용
신설	건설하도급 입찰 시 입찰 정보 공개 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찰참가자 중 일부에게 미공개하거나 입찰 결과의 일부라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 “미공개”로 간주</li> </ul>
	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 우수업체	-
	하도급거래 모범업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위반 사업자가 모범업체에 선정되어 별점을 경감받는 경우, 모범업체 선정요건과 중복되는 다른 경감사유는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음</li> </ul>
	수급사업자 피해 구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해구제비율 = 자발적 피해구제 금액 / 피해 금액 총액</li> <li>서면 직권 실태조사에 다른 경고, 자진 시정하여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이 부과된 경우는 피해 구제 비율에 미포함</li> </ul>
수정	표준계약서 사용 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 =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건수 / 기준연도에 체결한 총 계약건수</li> </ul>
	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직접 지급으로 불인정</li> </ul>

**[기대 효과]** 하도급법상 별점 누산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별점 산정은 매우 중요함.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개정 지침은 별점 산정의 통일성·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됨

#### 5.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및 비밀 유지 명령 도입

**[개정 사유]**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업자는 문서 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,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 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였음

**[개정 내용]** 금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해 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함 (하도급법 개정안 제25조의7~제25조의10)

	개정 전	개정 후
피해 기업의 자료 확보	<b>[민사소송법 상 문서 제출 명령 (제344조, 제347조)]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 제출 명령 거부 가능</li> <li>•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 기업의 자료 확보에 난점</li> </ul>	<b>[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]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</li> <li>•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(*)에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(예: 원사업자의 발주 취소 등)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능</li> </ul> <p>(*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,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)</p>
사업자의 영업 비밀 보호	-	<b>[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]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함 (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)</li> </ul>

**[기대 효과]** 이와 같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는 하도급법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.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료의 공개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해당 제도가 도입된 특허법 등의 관련 실무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이 정리될 것으로 보임. 궁극적으로는 손해배상제도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## 6. 기타 개정사항

그 밖에 금번 개정안은 과징금 분할 납부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분할 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5억원으로 규정할 예정이며 (하도급법 개정안 제25조의3),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기존 정산합의서로 서면 발급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 공사 금액에 관계없이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(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III. 3. (9))

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법, 동법 시행령 및 지침이 전반적으로 하도급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개정된 바, 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따라서 원사업자로서는 개정 법령의 집행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**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**

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, 법무법인(유) 충정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적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